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 6 / 22 통권 157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 끝이 좋아야 한다(1)

### 증여의제이익 계산 해설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 박윤종 회계사 :

임원의 조기은퇴 추가 지급액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 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른 세금차이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 해설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헛봇으로 24시간 상 담하세요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귀금속 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 판매시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p.13)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자산취득금액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경우의 회계·세무처리>

개념, 구분	반환하는 경우	일정조건, 기간 후 반환 보조금 수입	전액 일시지원 수입
거래판단	일종의 무이자 차입금	국가 등 부여하는 업무 수행	국가 등이 설비구입 단순 보조
취득시 처리	(차) 설비자산 1000 (대) 차입금 1000	(차) 설비자산 1000 (대) 현금예금 400 국고보조금 600	(차) 설비자산 1000 (대) 현금예금 500 보조금수입 500
연말표시	국가 등 차입금(부채) 반영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반영 (차) 설비자산 1000 (국고보조금) (600)	보조금은 영업의 수익처리
감가상각	5년 가정 (차) 상각비 200 (대) 상각누계액 200	(차) 상각비 200 (대) 상각누계액 200 (차) 국고보조금 120 (대) 국고보조금 수입 120	(차) 감가비 200 (대) 상각누계액 200
세무익금	국고보조금 익금산입 안됨	국고보조금도 5년 상각으로 익금분할산입(손익계산서 에 수입 반영)	국고보조 받은 연도에 전액 수익처리(익금산입됨)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회계상 당기 수입반영하지 않은 경우 전액 익금불산입 ○유보 후 5년 분할 익금산 입 가능함	세무조정 없음 (자동 익금산입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76호 / 주간 25호

2022. 6. 22. (수)

· 발 행 인 : 이 윤 언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자산취득금액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경우의 회계·세무처리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임원의 조기은퇴 추가 지급액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른 세금차이	2
C E O 에 세 이	CEO, 끝이 좋아야 한다(1)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직원 출장 시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에 대한 비용인정 문의 - 무형 라이선스에 대한 감가상각 질의 -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가요 - 주식선택권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2주택자 절세 예시	10 11
직 장 인 Survival	세익스피어의 9가지 인생명언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서면전자세원-5047, 2021.08.1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법령법안-2628, 2021.11.11)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여당, 법인세율 25→22% 하향 착수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귀금속 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 판매시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13
세 무 정 보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 해설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16 34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5

# 임원의 조기은퇴 추가 지급액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른 세금차이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 • 사례 :

1년 연봉 2억원, 총 퇴직금 5억원(10년 근속, 지급율 3배수) 중 조기퇴직 전별금 1억원의 세금 차이

개념구분	퇴직금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여금 등 근로소득으로 분류	차이
퇴직연도 연봉의 한계세율	1.5억 ~ 3억원까지 : $38\% \times 1.1 = 41.8\%$ ㉑	좌동	없음
연봉에 대한 건보료	$\oplus 6.47\%$ ㉒	좌동	없음
추가소득 한계 부담율	$= 48.27\%(㉑+㉒)$	48.27%	없음
총 퇴직금	5억원(전액)	퇴직금 4억원(+연봉 1억원)	$\ominus 1$ 억원
퇴직소득세 계산	(5억원 - 기본 400만원) $\div 10\text{년} \times 12 = 595,200,000\text{원}$ • 퇴직소득 공제액 : 151,700,000 + 103,320,000 = 255,020,000원	(4억원 - 400만원) $\div 10$ $\times 12 = 475,200,000\text{원}$ • 퇴직소득 공제액 : 151,700,000 + 61,320,000 = 213,020,000원	$\ominus 120,000,000\text{원}$ (연환산)

퇴직소득세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소득 과표 : 595,200,000 - 255,020,000 = 340,180,000원</li> <li>• 연 환산세금 : 94,600,000 + 40,180,000 × 40% = 110,672,000원</li> <li>• 최종 세금 : 110,672,000 ÷ 12 × 10년 × 1.1 = <u>101,449,333원</u>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소득 과표 : 475,200,000 - 213,020,000 = 262,180,000원</li> <li>• 연 환산세금 : 37,600,000 + 112,180,000 × 38% = 80,230,000원</li> <li>• 최종 세금 : 80,230,000 ÷ 12 × 10년 × 1.1 = <u>73,544,166원</u> ㉡</li> </ul>	⊖27,905,167
1억원의 근로소득세 +건보료 등	0	1억원 × 48.27% = 48,270,000원 ㉢	⊕48,270,000원
총 부담액	㉠ 101,449,333원	㉡ + ㉢ = 121,814,166원	⊕20,364,833원

# CEO, 끝이 좋아야 한다(1)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중국 남북조시대 양(梁)나라에 장승요(張僧繇)라는 화가가 있었다. 현재의 남경인 금릉 안락사(安樂寺)의 정중한 부탁으로 그는 절의 벽에다 용을 그려 주게 되었다. 이윽고 두마리중 한마리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 그러자 그 용은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해 버렸다. 이것이 화룡점정(畫龍點睛)이다. 즉 가장 요긴한 곳과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고사다. 할리우드 서부영화인 1960년대 '세인'이라는 영화가 있다. 당시 인기배우 아란 랫드가 주인공 카우보이 역을 멋지게 해냈다. 재빠른 솜씨의 총놀림으로 맞대결에서 최후의 악당 두목까지 쓰러뜨렸다. 그런 후 그는 황혼을 향해 미련없이 말고삐를 거머쥐고 표표히 떠나는 라스트 신은 관객을 몽클하게 감동시켰다. 요컨대 CEO도 떠날 때를 알고 또 끝맺음이 좋아야 한다.

## 떠날 때를 알아야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같은 CEO'꿈'을 소개한 바가 있다. 쌍기역(ㄲ)자로 된 일곱 글자다. 꿈, 꾀, 꾀, 꾀, 꾀, 꾀, 꾀, 끝이 그것이다.

'꿈'이 있어야 한다. 즉 비전의 전도사여야 한다. '꾼'이다. 일꾼, 장사꾼이어야 한다. 입만 앞서는 '말꾼'이 아니다. '꾀'가 넘쳐야 한다. 냉철한 머리의 전략가여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working harder)보다 슬기롭게 일하는 것(working smarter)이 중요하다. '깡'이 있어야 한다. 갈대처럼 눈치나 봐서는 안된다. '끼'가 넘쳐야 한다. 물론 매미처럼 놀기만 잘하는 '똥따라 끼'와는 혼동해서 안된다.

'끈'이 있어야 한다. 오너의 끈보다 고객과의 끈, 종업원과의 끈, 사회와의 유대가 중요하다. '꼴'이 좋아야 한다. 오너 앞에서 출랑대는 방자나 느낌보 꼴 같아서도 안된다. 덧붙여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한국속담이 있다. 셰익스피어도 "명배우는 퇴장할 때를 안

다"고 했다. CEO는 떠날 때를 대비하여 후계자가 아닌 후임자를 발굴하는데 공정해야 한다. 후임자 문제에 있어 떠나는 CEO가 깊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훌륭한 CEO의 출현은 육성되고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리더는 발굴되어 스스로 성장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떠나는 CEO는 공정해질 수 있다. 떠날 때는 지저분하지 않게,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한 말씀하였다.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의 정사를 논하지 말라." 고문이니 명예회장이니 하는 어정쩡한 자리에 앉아서 책임지지 않는 언행을 삼가하라는 뜻이다.

## 떠나면 미련없어야

어느 자리든 끝맺음이 중요하다. 찍하면 국민의 피와 땀인 공적자금을 집어먹었으면서도 뽀뽀하게 호화판 생활을 즐기는 상당수 한국의 대기업CEO들, 감옥을 들락거리는 국가 최고경영자들을 보고 있자면 할 말이 없다.

'아름다운 은퇴'로 CEO의 끝맺음을 보여주었던 미래산업의 정문술 전(前)사장의 사례는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다. 잘 나가는 알짜기업을 평소 '투명경영'을 강조해오다가 전문경영인에게 바톤을 넘겼다.

"제가 한 은퇴결단을 '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수렴청정'의 유혹도 받았지만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아야 지휘봉을 놓는 창업주들이 많습니다. 미련을 못버리는 것이지요. 회사가 '자기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업활동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지만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자선문화를 개발하는데 매일 매일을 바쁘게 보낼 예정입니다."

## 직원 출장 시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에 대한 비용인정 문의

**Q** 회사에서는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와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비는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정산(한도있음), 소액경비와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 (영수증 미첨부)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직원의 출장비 등과 관련된 경비 지급시에는 사회통념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 하되 증빙을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통제 등의 이유 등으로 증빙없이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직원에게 지급 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사회통념상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Q.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범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ex. 10만원 이하 수준의 비용지급 등)

Q. 직원의 출장명목의 비용집행 시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를 지급할 경우 증빙불비 등의 가산세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A**

1. 회사내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 사회통념상 범위는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실비변상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형 라이선스에 대한 감가상각 질의

**Q** 자사는 현재 개발을 위하여 무형의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 3년이상 사용
- 500만원 이상
- 소유권은 공급자한테 있음
- 처음 구입 하고 기간에 따라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비용이 기간 마다 발생 하지만 이를 지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EX: 구입비 : 2천만원 , 유지보수 비 2년에 300만원)

위의 경우에 무형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처음 구입비는 자산을 잡고 감가상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모두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소유권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용 기간과 금액이 클 경우 상각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 통상 소유권이 없으면 귀사가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가요

Q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자산-부채) - 자본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자본조정 중 부가계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이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차감할 미실현이익 중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가감하는데, 이때 이연법인세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가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주식선택권

Q

비상장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데 2월에 발생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5월에 한번더 발생할 경우 발생분에 대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2월에 받은 평가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주식매수선택권의 발생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월 발행분에 대해 5월평가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금전의 수수를 동반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나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리실무자라면 누구든지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들이 존재하는 바,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상품권거래, 입회금, 지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가 애매하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과되는 것인데 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파손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의 해지로 공급자가 받는 위약금, ③ 공급기일 등의 지연으로 인해 공급받는자가 받는 지체상금, ④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한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손해배상금·위약금·지체상금·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계약의 파기 또는 재화 등의 파손에 따른 배상의 성격으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거래가 된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입금표 등의 영수증만 주고 받아도 세무상의 문제는 없다.

#### ♣ 서삼-2283, 2007.08.16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371, 2001.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225, 2007.01.23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663, 2006.04.05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

## 상품권 등의 화폐대용 증권

수표나 어음, 상품권 등의 화폐를 대용하는 증권은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러한 화폐대용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서삼46015-10145, 2001.9.6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입회금

체육시설, 콘도, 골프장 이용을 위한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받기로 한 입회금도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부가46015-1831, 1995.10.5.

휴양시설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종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표 2억원 이하	9/109
		과표 2억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 (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6/106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그 밖의 사업자		2/102



###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사업자		과세표준	공제한도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1억원 이하	65%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50%
	음식점 외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
법인사업자		전체	40%



## 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2주택자 절세 예시

종전주택 8억원에 취득, 7년 보유·거주 후 올해 7월에 1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 이사 위해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작년 5월에 20억원 상당 주택 매입했을 때

	종전규정 적용 시	개정규정 적용 시	절세금액
취득세 등	중과세율 8.0% 1억 6,800만원	취득세율 3.0% 적용 6,600만원	1억200만원
양도소득세 등	특례기한 1년 2억3,803만원	2년(기한 연장) 986만원	2억2,817만원
합계	4억603만원	7,586만원	3억3,017만원



## OECD 국가의 직계비속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2020)

	국가명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 승계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기업 상속 공제율
1	일본	55% (부가세 고려 66%)	55%	비상장 중소기업 100% (상한 없음)
2	한국	50% (주식할증고려 60%)	50% (주식할증고려 60%)	중소·중견기업 100% (상한 200~500억)
3	프랑스	60%	45%	75%
4	영국	40%	40%	50~100%(상한 없음)
	미국	40% (주별 세금 추가 가능)	40% (주별 세금 추가 가능)	-
6	스페인	34% (부가계수고려 81.6%)	34% (부가계수고려 40.8%)	95%
7	아일랜드	33%	33%	90%
8	벨기에	80%	30%	기업공제시 상속세율 3% 적용
	독일	50%	30%	85~100%
10	칠레	35%	25%	-
11	네덜란드	40%	20%	① 100%공제 : 1,102,209유로 이하 ② 83%공제 : 1,102,209유로 초과분



## 세익스피어의 9가지 인생명언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넷째. 부탁 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 받는다.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마라.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리적 추구를 게을리 하지마라.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늙어 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없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덟째.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좁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  
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아홉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려 갈 필요는 없다.  
그때까지는 삶을 탐닉하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귀금속 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 판매시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  
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서면전자세원-5047, 2021.08.13

### Ⅰ 질 의

- '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되었음

####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Ⅰ 회 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나, 질의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사전법령법안-1540, 2021.11.11

### Ⅰ 질 의

- (질의1) 내국법인의 법인설립등기 당시 목적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창업중

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창업 이후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설립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Ⅰ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는 전  
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  
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재산-248, 2021.09.27

### Ⅰ 질 의

- (질의1) 취득한 신규주택이 4인 가족이 전입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 중 전입요건의 예외사항이 되는지

-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 시적 2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 ■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신규주택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628, 2021.11.11

## ■ 질 의

- A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를 추진 중임

- \* 원격모니터링으로 작물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육 단계별 정밀관리 예측을 통해 수확량 및 품질 등을 향상시킴
- A법인은 스마트팜 시설을 통한 작물재배(방울토마토 등) 및 시설 관리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여당, 최고 법인세율 25→22% 하향 착수… 文정부 이전으로 축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 문'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1.5%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비중은 1998년 72.8%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 61.3%로 11.5% 포인트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은 13.9%에서 24.5%로 10.6% 포인트나 올랐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00년 기준 국민총생산에서 법인세 비중은 3.0%였으며, 2016년에는 3.6%였다. 기업들이 버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내는 세금 비중도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만큼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기업이 버는 돈의 규모도 커져 법인세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사에서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다.

정부가 법인세 등 세금을 거두는 것은 사회공공서비스 외에도 가계나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대한 자제…조사시기, 납세자 직접 선택”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14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

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되 성실한 중소기업자들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세무조사 품질을 위해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 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감세 시동… 반도체 등 시설투자감면 300% 이상 확대

국민의힘이 강력한대기업 세금감면 드라이브를 건다.

여야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지만, 최소한 현재의 배 이상의 세금감면을 하겠다는 의도는 뚜렷하다.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부문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확대한다.

기술분야 대기업들은 매년 상시적으로 거액의 투자비용을 지출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히 투자를 늘리지 않아도 막대한 세금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 국세청, 2022. 6

- (신고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신고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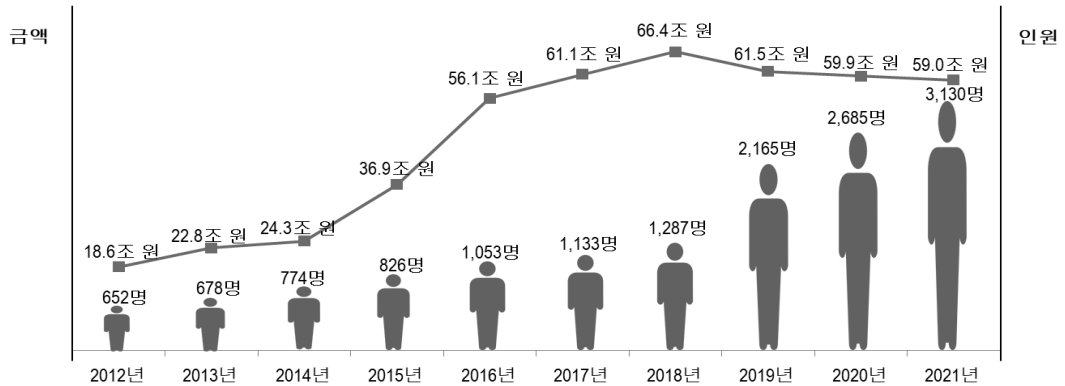
### 1. 제도 도입 및 정착

-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

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2. 제도 개선

-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II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 1. 신고의무자




- ('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를 6. 3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 '21. 12. 31.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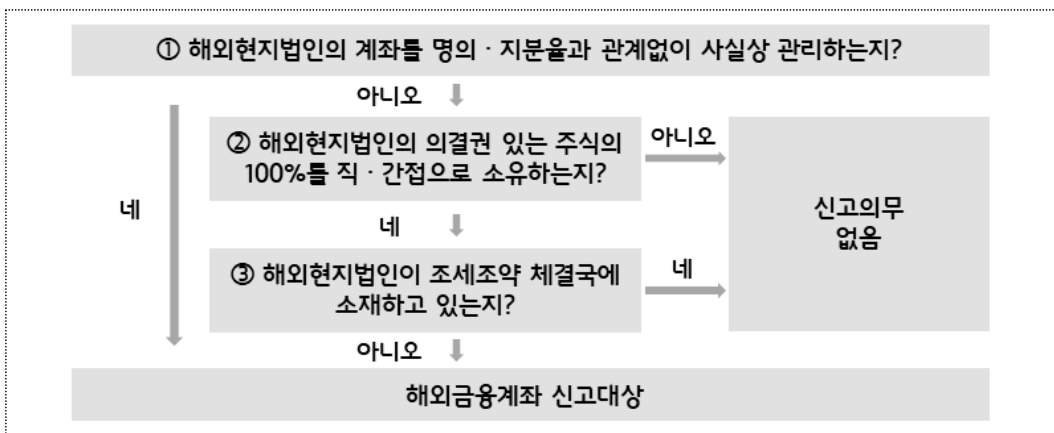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의무자	 Dec. 31	'21.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의무 면제자		외국인 거주자 ➡ '12~'21년 동안 국내거주기간 5년 이하 재외국민 ➡ '21년 동안 국내거소기간 183일 이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기준금액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기한		'22. 6. 30. 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 (현지법인 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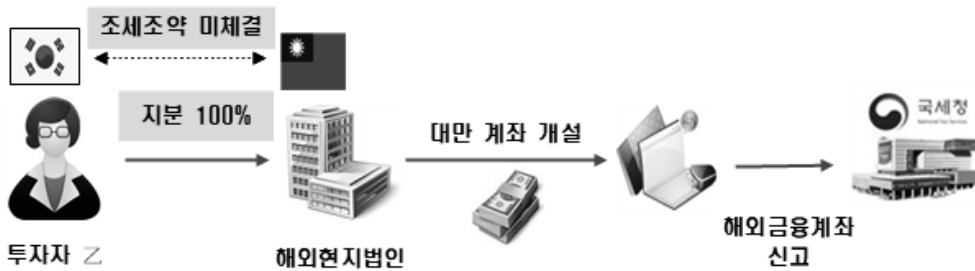
【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정 요령 】

① 해외현지법인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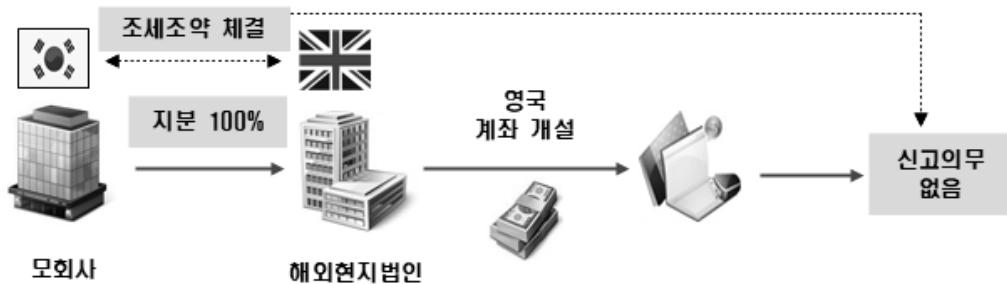
⇒ 甲이 조세조약 체결국인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지분율이 10%라도 미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②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



⇒ 乙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대만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대만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③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체결국인 경우



⇒ 국내 모회사가 영국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한 경우 영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이므로 국내 모회사는 영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없음



- (공동명의계좌 등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한편,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해외체류자 계좌신고)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2. 신고대상

- (금융자산 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임
  -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 (계좌 관련자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신고대상 연도 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련자 일련 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 (국외소득·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신고방법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2. 6. 30. (목)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45번 서식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로)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 → 2 → 6)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 1. 보유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하여,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 공동명의의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잔액 전부를 합산(지분액 합산 아님)

## 【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자 산	산출방법
현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집합투자증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2. 신고기준금액 산정

-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보아,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21년 보유한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이고,  
 - 그 중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 현재 (신고기준일) 보유한 A(3억 원) · B(1억 원) · D(4억 원)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2월 말) 이후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사례 】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 IV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 1. 과태료 부과

- ☐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과소)신고 과태료 】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 ~ 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MIN(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미(과소) 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미(과소) 신고 과태료 이외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2.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국세청은 '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 V

####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

- ☐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 VI

####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VII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검증

-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역외탈세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의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올해는 이를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 공정과 원칙에 반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하여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 자산소득 양성화, 공정성 제고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에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상식을 유념하여 해당계좌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1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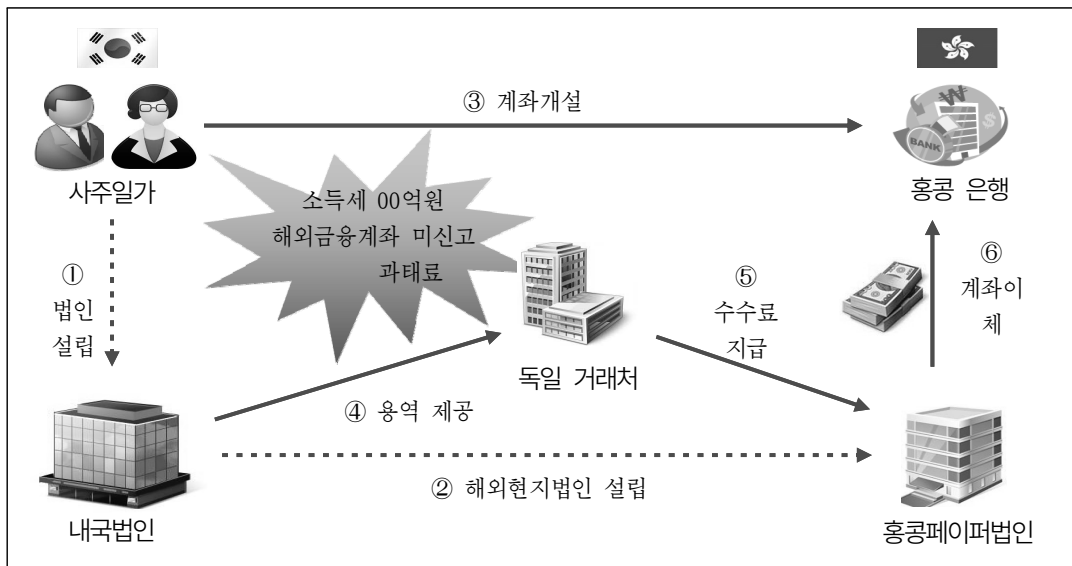
**사례 1**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우회 수취한 거래처 알선 수수료 신고누락 적발

## □ 인적사항

○ 성 명 : ○ ○ ○, ◆◆◆

○ 주소지 : ○○시

## □ 주요 적발상황



- 사주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로부터 받고 있는 알선수수료 00억 원을 미신고된 홍콩 명목상 회사 계좌로 수령한 후 사주일가의 홍콩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은닉
-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해외계좌 및 금융자산 적발

## □ 조치사항

- 사주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과 알선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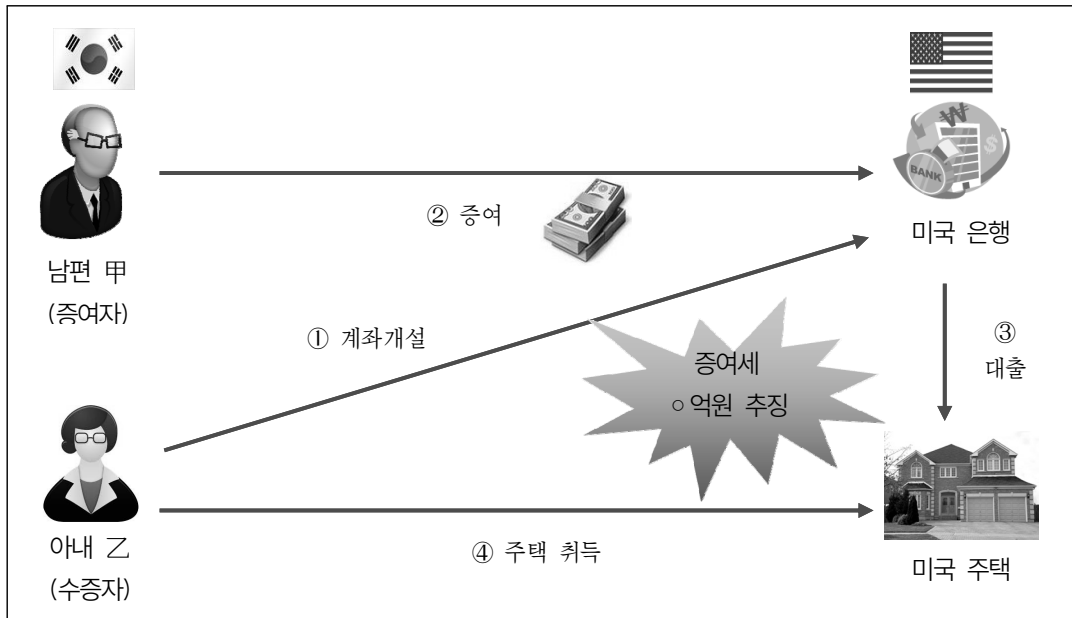
**사례 2**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인적사항

○ 성 명 : ○ ○ ○

○ 주소지 : ○ ○ ○ 시

☐ 주요 적발상황



- 아내 乙은 미국에 계좌를 개설한 후 남편 甲이 증여한 00억 원과 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0억 원을 합하여 미국 주택 취득
- 乙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으나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乙이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0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0억 원 추징



##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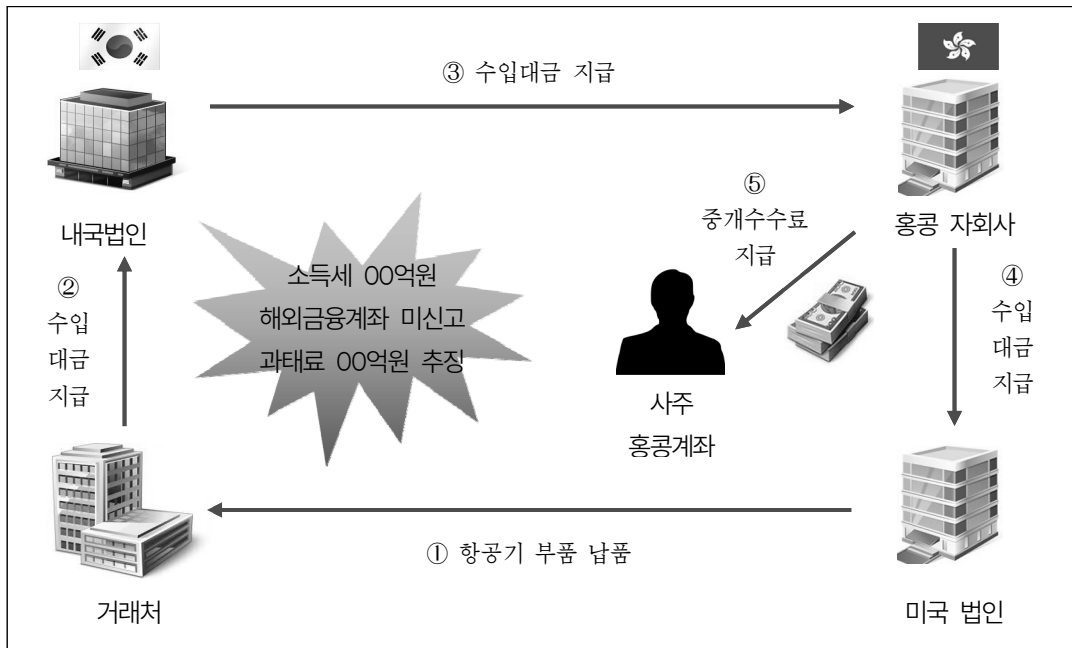
### 사주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 중개수수료 은닉 적발

##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 주요 적발상황



- 사주의 내국법인은 미국, 이스라엘 및 폴란드 군수장비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하여 공군 부대에 납품하는 업체임
- 사주는 홍콩 자회사에 무기 중개용역을 제공한 후 홍콩 계좌로 중개수수료 00억 원을 받았으나 해당 홍콩 계좌 및 소득세 신고누락

## □ 조치사항

- 사주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 추징

## 붙임 2 -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 1. 2021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1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2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1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3.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말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 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4.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 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 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 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 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 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 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5.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6.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7.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2023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8.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http://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9.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10.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11.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2.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13.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붙임 3 - 거주자 판정기준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li> <li>-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li> <li>-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li> <li>-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li> </ul> </li> <li>*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령\$2③</li> <li>◦ 소령\$2⑤</li> <li>◦ 소령\$3</li> </ul>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li> </ul> </li> <li>-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법\$1-2①</li> <li>◦ 소령\$4②</li> </ul>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소령 § 2①)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 붙임 4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해설

— 국세청, 2022. 6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 세후영업이익 = (가 - 나) × 다

-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다. 과세매출비율

###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상증령 §34의3⑩1).

###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① ± ②)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② 영업손익과 관련된 아래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주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을 말하므로, 세무조정 전 영업손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 첨부서류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는 영업손익과 관련된 7개 세무조정사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 예시

- ① 매출 누락액
- ② 계정과목 분류 오류 :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를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가액
- ③ 가공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 ④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손금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경비 손금부인액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① × ②)

- ①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
- ②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과세매출비율(상증령 § 34의3③)

$$\text{과세매출비율} = 1 - \left( \frac{\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매출액 포함)}}{\text{수혜법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right)$$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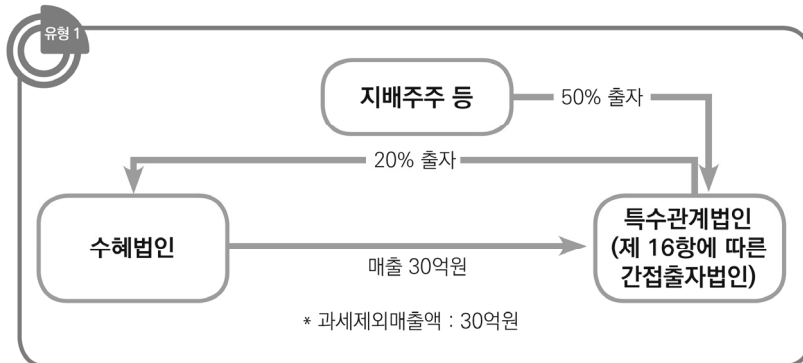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과세매출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서 설명한 "과세제외매출액" 8개 유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증령 §34의3⑫).
-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8개 유형) 차감한 후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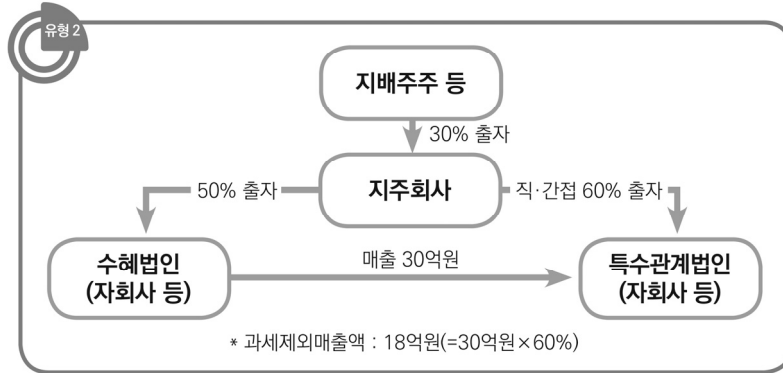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⑫)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하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라 함)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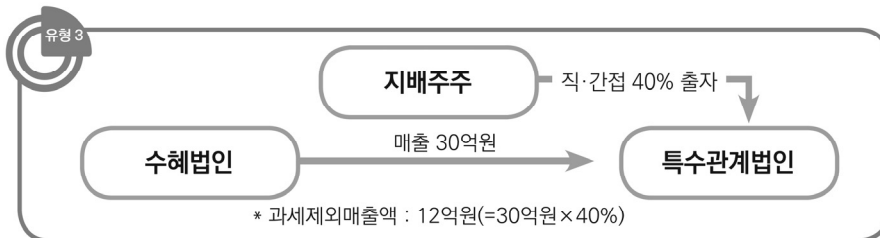
- ①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상증령 §34의3⑫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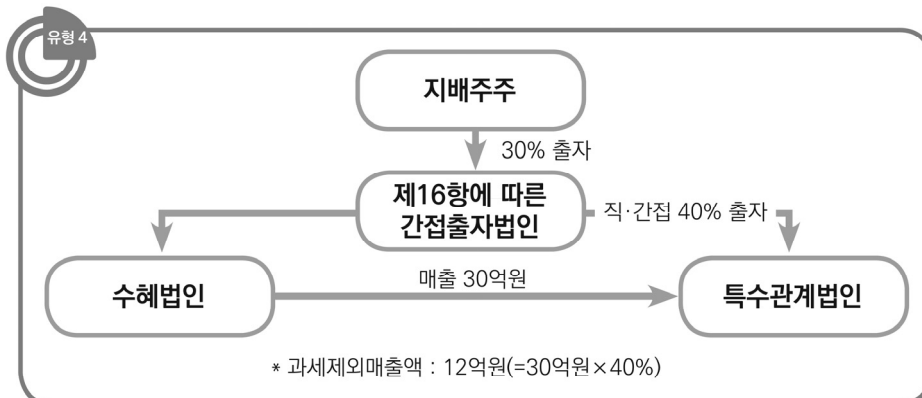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2).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3)



- ④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4, 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동조 제1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범위 (상증령 §34의3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과세매출비용 산정시 적용)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 과세요건 판단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과세매출비용

$$\left[ \frac{\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times 100 \right]$$

### 3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 중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거래비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40%)의 1/2을 초과하는 비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말합니다. (상증법 §45의3①).
-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증자인 각 주주별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증령 §34의3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만 반영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left[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
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left[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0 \cdot 20\%$

####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직접 + 간접)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보유비율 - 0 %	주식보유비율 - 10 %	주식보유비율 - 5 %

◎ 중소·중견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곱하는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주주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 10%, 중견 5%)을 차감한 비율을 말합니다.

※ 일반기업은 주식보유비율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 ◆ 한계보유비율 차감 순서(상증령 §34의3⑩)[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
-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차감
-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0.1%)미만인 경우의 간접출자관계는 제외되므로 한계보유비율 차감 대상이 아님

◎ 수증자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만을 말합니다.

- 이는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에만 고려할 경우 제3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하되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경우까지 확대되는 경우 과세실익은 미미하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아래와 같은 일정 범위의 법인으로 제한한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방법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비교

##### ● 지배주주 판정시 (상증령 §34의3②)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증령 §34의3⑬)

-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② 지배주주 등과 ①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 5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 증여의제이익 계산

- 각 수증자별로 계산(법인유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짐)
  -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2이상인 경우는 각각 계산)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함
- 배당받은 소득에 대한 일정금액 공제

#### 가.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상증령 § 34의3⑬).
  -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으로 합니다.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상증령 §34조의2①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①)

- 법 제51조의2제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용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left[ \text{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left( \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right) \right]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나.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 이익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상증령 §34의3⑰).

다.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 지배주주 1명이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라.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 ◎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상증법 § 47②)

-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물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 47①).

## 마. 요약

수혜법인		과세 요건	요건 충족	증여의제이익 계산
중소기업	주식보유비율	> 10%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주식보유비율- 10%]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50%		
중견기업	주식보유비율	> 10%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주식보유비율- 5%]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40%		
일반기업 (공시대상기업 집단포함)	주식보유비율	> 3%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 [주식보유비율- 0%]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30%		

\* 요건판단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증여의제이익계산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계산

### 1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증여의제이익은 (1)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간 부문별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하되 (2) 3년 후 실제손익으로 정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추가납부 및 환급)합니다. 즉, 사업기회를 최초로 제공받은 사업연도에 3년분을 일시에 신고·납부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실제로 발생한 부문별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당초 증여세 납부당시 계산했던 증여의제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납부했던 증여세를 환급받

을 수 있습니다.

### 가. 3년간 증여의제이익

#### ○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1)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 34의4 ③). 한편, 이러한 수혜법인의 이익계산 방법은 다음(3)의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수혜법인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에서 편의상 “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이라 한다.)

- 「법인세법」 제 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 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 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또한, 수혜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 ②)

- ①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②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 전체 매출액

#### (2)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계산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다음 ‘가’의 세액에 ‘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 나.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합니다.(상증법 §45의4③)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상증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 나. 정산 증여의제이익

(1) 정산사업연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규정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규정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당초 실제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45의4③)

### ○ 정산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상증법 §45의4④)

(2) 배당소득 공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정산증여의제이익) ÷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개시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나. 정산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10일(금)	6월 13일(월)	6월 14일(화)	6월 15일(수)	6월 16일(목)
미 달 러 (USD)	1257.60	1266.00	1286.00	1289.70	1291.30
일 본 엔 (JPY)	935.40	939.97	957.88	953.32	963.12
영 국 파 운 드 (GBP)	1570.49	1556.61	1560.69	1548.80	1570.35
캐 나 다 달 러 (CAD)	989.96	989.53	997.75	995.45	1001.47
홍 콩 달 러 (HKD)	160.23	161.28	163.82	164.29	164.51
위 안 화 (CNH)	188.02	189.00	190.60	190.96	191.98
유 로 화 (EUR)	1335.07	1330.25	1339.05	1345.22	1348.89
호 주 달 러 (AUD)	892.58	889.81	891.91	887.70	903.72
싱 가 폴 달 러 (SGD)	909.00	911.09	922.59	925.54	930.8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6.24	287.60	291.05	291.62	292.58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국세청, 2022. 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9월~)
-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청과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 건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 서비스를 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 ※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상담 내용의 90%를 차지
-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되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 또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하였거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감면 혜택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상담'을 제공한다.
    - \* 부동산 매매시, 자동차 매매시, 재산 상속시, 차량 구조변경 시 등

-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상담 채널로 간편하게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행안부는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위택스봇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개선의견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한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6월~9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 행안부는 '위택스봇'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안내와 지방세 민원상담 등을 통해 체납을 예방하고 혜택정보는 미리 안내하여 국민의 납세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세무담당 공무원의 단순 반복 민원 경감으로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장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위택스봇은 비대면서비스 활성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능형 서비스"라며, "민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디지털 지방세 상담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 참고 1 -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

---

### 1. 위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한 지방세 상담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화면 우측 위택스봇 선택(클릭) → 챗봇상담

### 2.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지방세 상담

- ①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여 채널 선택(채널추가)
- ② 지방세상담 채널에서 '지방세 챗봇에게 상담하기' 또는 '말풍선' 선택
- ③ 위택스봇 상담화면이 나오면 지방세 상담 시작





## 참고 2 -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목록

구분	유형	제공서비스	상담 내용
1	지방세 6세목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세 개요 및 과세표준</li> <li>■ 자동차세 납부방법, 부과 안내</li> <li>■ 자동차세 연납 안내</li> <li>■ 체납처분 정보</li> </ul>
2		주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세 개요 및 과세표준</li> <li>■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li> <li>■ 주민세 부과대상 및 과세여부</li> <li>■ 주민세 공제 및 환급</li> </ul>
3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개요 및 과세표준</li> <li>■ 특정취득 및 중과세 안내</li> <li>■ 취득세 세율 안내</li> <li>■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li> <li>■ 취득세 비과세 및 과세여부</li> </ul>
4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개요 및 과세표준</li> <li>■ 재산세 납부방법 및 고지서</li> <li>■ 재산세 부과대상 및 과세여부</li> <li>■ 재산세 부과 및 세액 문의</li> </ul>
5		등록면허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면허세 개요 및 과세표준</li> <li>■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방법</li> <li>■ 등록면허세 부과 및 과세여부</li> <li>■ 등록면허세 환급, 감면, 행정문의</li> </ul>
6		지방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득세 개요 및 과세표준</li> <li>■ 지방소득세 의무/대상 및 신고·납부</li> <li>■ 지방소득세 납기 및 납세지, 기타</li> <li>■ 지방소득세 부과, 감면, 환급</li> </ul>
7	일괄상담	생활민원 일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매매 시 지방세 정보</li> <li>■ 자동차 매매 시 지방세 정보</li> <li>■ 재산 상속 시 지방세 정보</li> <li>■ 차 구조 변경 시 지방세 정보</li> </ul>
8	지방세 공통정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신고 및 조회 방법</li> <li>■ 고지서 및 전자송달 정보</li> <li>■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li> <li>■ 지방세 부과정보 안내</li> </ul>
9		체납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처분 및 압류, 공매, 승계, 조회·납부 정보</li> <li>■ 환급금 대상, 신청방법 안내</li> </ul>
1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 정보 안내</li> <li>■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감면</li> <li>■ 다자녀 가정, 자경농민 감면</li> <li>■ 상속 주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li> </ul>
1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명서 관련 정보</li> <li>■ 지역자원시설세</li> <li>■ 담배소비세</li> <li>■ 레저세</li> <li>■ 지방교육세</li> <li>■ 구제제도 안내</li> </ul>